제1장

공간구조 전략

제1절 국토 남부권 중심, 유연한 광역권 형성

제2절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

제1장 공간구조 전략

제1절 국토 남부권 중심, 유연한 광역권 형성

1.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

1) 경남의 독자적 성장의 한계

● **도시지역 성장의 한계**

- 경남의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18%에 해당하며, 동부권과 서부권 일부만 성장 중임

● **부산과 울산이 인접한 대도시권의 성장**

-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김해, 양산 등의 대도시권만 인구가 증가하고 대부분 감소함

● **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요구**

- 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이었으나 기술 혁신 한계로 성장 가능성 하락

2) 광역도시권(Mega City Region) 중심의 성장 추세

● **전 세계 광역도시권의 증가 전망과 생산량의 극대화**

- 인구 천만명 이상의 도시는 2030년 43개로 증가하고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함

● **2000년대 이후 광역도시권 중심의 성장권역을 정책적 육성**

- 미국 America 2050(2006), 일본 국토 그랜드 비전(2014) 등을 통해 광역도시권을 육성함

3) 유연한[1]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경남 중심의 광역권 형성

● **도시의 기능을 뭉치는 전략(Compact City)**

- 부산, 울산과 연계한 동부권의 창원, 서부권의 진주, 북부 지리산권 등 도시 기능을 집약함

1) 유연한 :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기능중심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간 연계 · 협력

- **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전략(Network City)**
  - 도시의 기능을 연결하는 철도, 도로 등 물리적 기반과 인재 육성 등 지역 플랫폼을 연계함
- **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(Mega City)**
  - 경남을 둘러싼 도시권의 연계를 통한 기능적 연계와 집적을 통한 발전전략을 마련함

2.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

1) 추진전략 및 목표

- **핵심전략 :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**
- **전략목표 : 경남의 유연한 광역권을 중심으로 국토 성장의 핵심지대 형성**
- **정량목표 :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과 광역권별 공동과제 추진**
  -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진입을 위한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

2)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 공동체 형성

- **행정 공동체 구축 : 광역집행기관을 통한 지자체가 함께 구상하고 함께 실행하는 공동체**
- **생활 공동체 형성 : 교통망 구축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넘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**
- **경제 공동체 구현 : 광역권을 대표하는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**

3) 경남 중심의 2+3 광역권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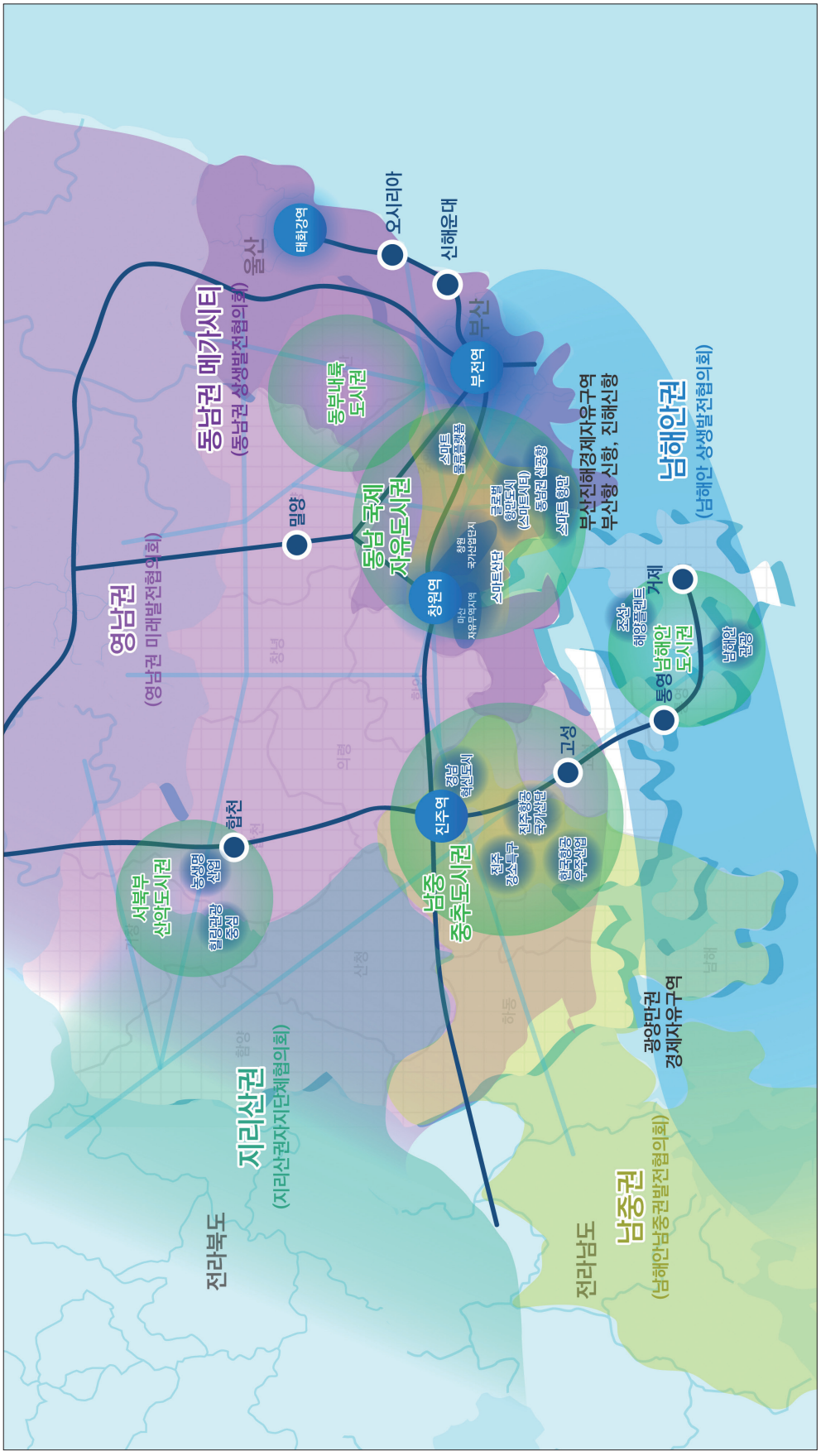
(1) 동남권 성장권역 육성

- **동남권 메가시티[2] 확립**
  - 부산, 울산, 경남 성장지대를 중심으로 국토 동남권 성장
- **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확대**
  - 동남권 메가시티와 대구 · 경북이 함께 더 큰 메가시티로 성장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

2) '동남권 메가시티' 또는 '부울경 메가시티'로 표현되며, 편의상 본 보고서에는 '동남권 메가시티'로 통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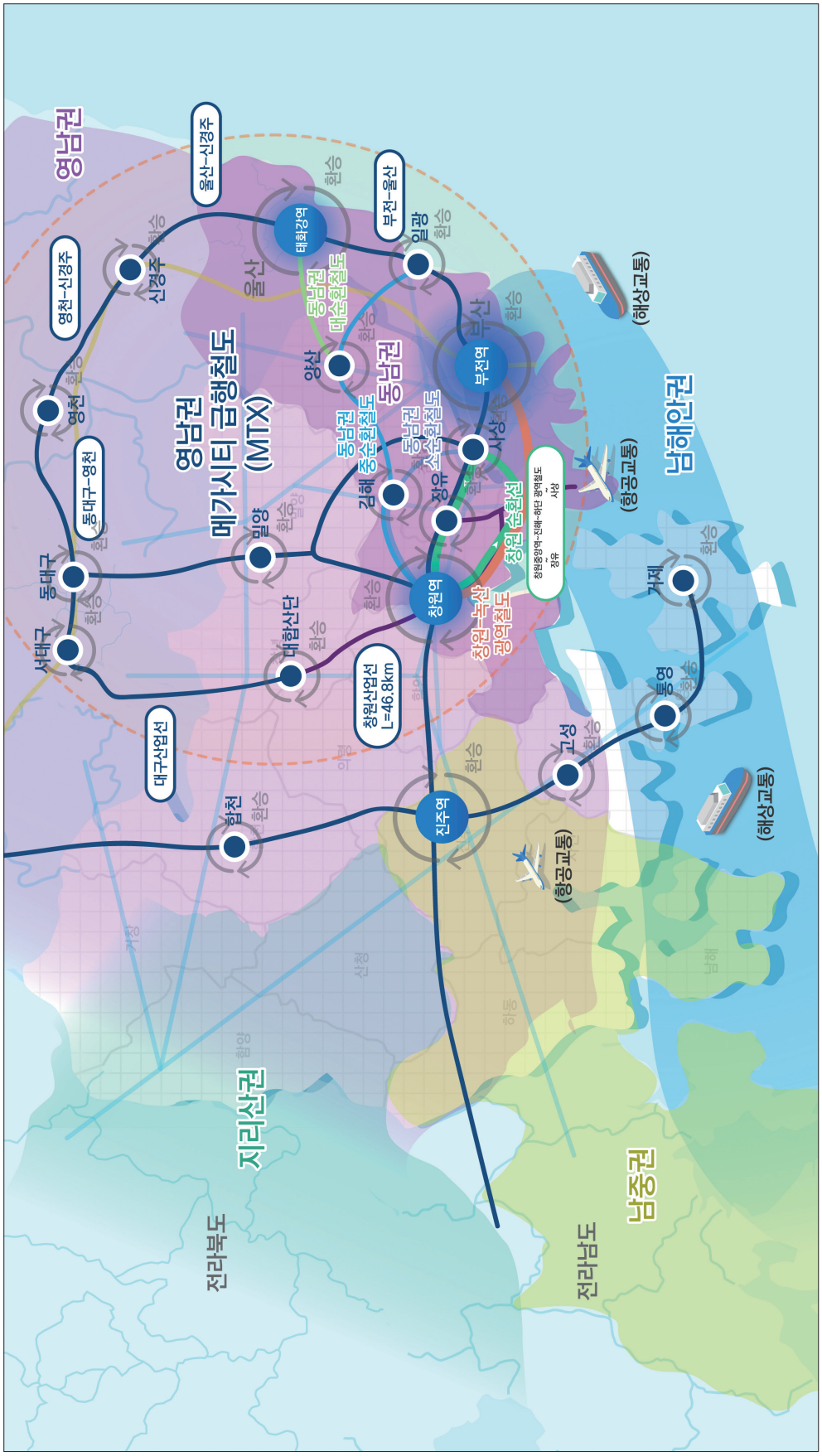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-1-1〉

「국토 남부권 중심, 유연한 광역권 형성」 공간 구상도



〈그림 3-1-2〉

「국토 남부권 중심, 유연한 광역권 형성」 교통망 구상도



(2) 경남 중심의 광역권 설정

남해안 관광벨트 상생 발전

- 부산, 경남, 전남 등 남해안 권역의 문화, 관광, 산업의 성장축을 형성함

남중권 발전 공동 추진

- 해양과 내륙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남중 중추 도시권을 형성하고 공동 발전사업을 추진함

지리산권 자치단체 연계협력

- 국토 산림생태축의 시작점인 지리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을 추진함

3.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

1) 동남권 성장권역 육성

(1) 동남권 메가시티 확립

행정 공동체 구축

- 부산 · 울산 · 경남의 행정기능을 위임하여 광역집행기관을 구성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며, 가칭 '동남권 광역특별연합'을 구성하여 사업을 관리함
- 초기 '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'를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고, 장기적으로 가칭 '동남권 광역특별연합'의 형태로 단계별 행정기능을 위임하여 기능을 강화함

생활 공동체 형성

- 부전–마산역 복선철도의 개설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의 30분대 생활권을 형성함
- 철도, 항만(부산신항, 진해신항), 공항(동남권 신공항) 등 3개의 교통 기능 강화를 통해 권역 내부의 생활권이 밀접해지고 국내외 연계 거점으로 성장함

경제 공동체 구현

-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형성을 위해 지역에서 기획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소 메가블록, 동북아 물류 플랫폼, 동남권 한류 문화 벨트, 국가 내진 산업 네트워크 등을 추진함
- 전후방 산업의 연계성이 높은 장점을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선도함

(2)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확대

행정 공동체 구축

-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대구 · 경북이 함께 하나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행정 협의회의 경험을 토대로 행정 공동체를 형성함

– 현재 대구와 경북은 광역 단위 통합을 추진이며, 2021년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사업 발굴 예정

-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상을 연장하여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을 추진함

생활 공동체 형성

- 동남권(마산–부전–울산) 전동열차(EC), 영남권 광역급행철도(MTX) 등 광역교통체계 형성을 통해 30분 이내 생활권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별 거점기능을 분배함

- 대도시권(부산, 대구, 울산, 창원)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능 배분과 연계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시간과 공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하여 연계함

경제 공동체 구현

- 동북아 물류 R&D 거점, 동남권 수소경제 전환, 탄소 메가 벨트 등 영남권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

2) 경남 중심의 광역권 설정

(1) 남해안 관광벨트 상생 발전

행정 공동체 구축

- 3개 광역지자체(부산, 경남, 전남)와 33개 기초지자체가 해당하며, 2020년 6월에는 수정된 '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'이 발표되면서 향후 10년간의 사업이 확정됨

–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확정과 함께 2020년 6월, 부산 · 경남 · 전남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함

-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광역과 광역, 기초와 기초 간 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업 추진이 필요함

생활 공동체 형성

- 해양과 내륙을 활용한 연계를 통해 남해안의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남도문화권과 도심해양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 도입이 연계된 상생과 번영을 추진함

-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, 친환경 해양 신사업 육성, 글로벌 물류거점 등을 추진함

경제 공동체 구현

-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,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항 광역경제권 조성 등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동서 간의 상행과 협력의 남해안권 벨트를 형성함

– 4개 추진전략과 7개 프로젝트(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)를 추진할 예정임

(2) 남중권 발전 공동 추진

행정 공동체 구축

- 2011년부터 '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'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, 현재 2020년 8월부터 6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어 공동사업 추진과 정책 건의 활동을 진행 중임

– 전남(여수, 순천, 광양, 고흥, 보성)과 경남(진주, 사천, 남해, 하동) 등 9개 기초지자체 참여

생활 공동체 형성

- 남중권 발전을 위한 사업 중 섬진강 일원의 연결하는 교량 건설 등의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, 철도와 해양 교통을 통한 연계 생활 공동체 형성이 추진 중임

– 동서통합 남도순례길, 남도2대교, 동서해저터널(남해–여수) 등이 추진을 준비 중임

경제 공동체 구현

- 지역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, 친환경 해양산업 육성 등의 3가지 방향으로 남중권의 경제 공동체의 먹거리 확보가 필요함
- 진주–사천 중심의 항공산업과 연계된 무인기 종합타운, 광양의 금속 소재 관련 연구개발, 청정연료 공급을 위한 LNG 벙커링 클러스터 등 현재 수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함

(3) 지리산권 자치단체 연계협력

행정 공동체 구축

- 1998년 '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'를 시작으로 지리산권의 3개 광역과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'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(2008년)'이 결성되었으며, 16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중임

– 전북(남원, 장수), 전남(곡성, 구례), 경남(하동, 산청, 함양)이 참여함

- 2006년 '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'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되었으며, '제4차 국토종합계획(국토부)'과 '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(문체부)'에 반영되었음

생활 공동체 형성

- 관광상품 개발. 관광기반 정비, 교통 안내 체계 개선,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 4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연계 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KTX역과 지자체별 연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순환 관광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하고 있음

– 지리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며, 접근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

경제 공동체 구현

- 지리산이라는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, 통합축제, 관광숙박시설 등을 연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함께 경제 공동체 구현을 추진함
- 2006년 계획 수립 후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관광 수요 및 트렌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및 과제 발굴을 추진해야 함

– 남부내륙철도 조성 등 수도권 접근성 향상, 산양산축제(함양) 등 지역 특화축제의 다양화,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계획 수립이 필요함

(공간구조전략1) 시 · 군 계획지침

- 산업, 교통, 환경, 토지이용 등 분야에서 시 · 군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시 · 군과의 연계 · 협력 강화 방안 마련
- 시 · 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행정구역을 넘어선 기능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 방안 강구

제2절

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

1.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

1) 경남의 공간 현황

●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의 한계

-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해지면서 도시 성장 잠재력이 쇠퇴하는 한편,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수요, 노인 및 아동 등 복지 수요 발생 등 새로운 삶의 형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
- 지역의 여건과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과대한 성장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, 기성 시가지의 쇠퇴, 인구 유출, 주택 미분양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도시문제를 가속할 수 있음

● 사회적, 공간적 양극화 심화

- 사회적, 경제적으로 세수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재정 부족, 투자 및 소비 둔화, 성장 동력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, 도시공간 측면에서도 건설투자와 개발수요가 감소하면서 주거지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
- 경제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,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, 노인가구, 1인가구의 빈곤율은 더 높아져 주거 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

2)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의 필요성

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 중심의 도시재생 필요

-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의 외연적 확산과 성장보다는 도시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. 주민 개개인의 생활을 중시하여 저출생, 고령화에 대응하고, 기성 시가지 활용을 위해 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접근성 향상, 생활 서비스 시설공급,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해야 함

2.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

1) 추진전략 및 목표

● 핵심전략 :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

● 전략목표 : “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민 생활권 및 편익 확대” 실현

● 정량목표 :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경남 1시간 생활권 구축

〈표 3-1-1〉
「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」 정량 목표

구분	현재 수준	1단계 목표(2030년)	2단계 목표(2040년)
승용차 대비 농어촌버스 통행시간	180%(서비스수준C)	150%(서비스수준B)	120%(서비스수준A)
대중교통 접근시간 10분 이내	58.6%(2018년)	60%	70%
경남내 이동시간	약 2시간	약 1시간(거점도시 30분)	약 1시간(거점도시 30분)

주` : 전국 평균 대중교통접근 수단 비율은 도보가 93% 이상으로, 대중교통 접근시간 측정값은 도보 통행시간인 10분 이내 도보거리로 가정함.

2) 추진방향 및 전략

(1)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추진방향

(공간구조) 생활권 중심의 공간 재편

- 행정구역 경계를 넘은 자립적인 공간 단위 설정을 통해 시민, 군민을 넘어 도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편
- 저출생, 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간정책과 주거환경 정책 연계

(집약) 거점 도시 기능 유도 및 축소 예상 지역 중점관리

- 기성 시가지와 원도심은 다양한 도시재생 수법을 통해 재정비하여 도시기능 집약
-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후화로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

(연계) 지역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

- 대중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외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
- 인적, 물적, 정보 등이 지역 간 활발히 교류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

(2)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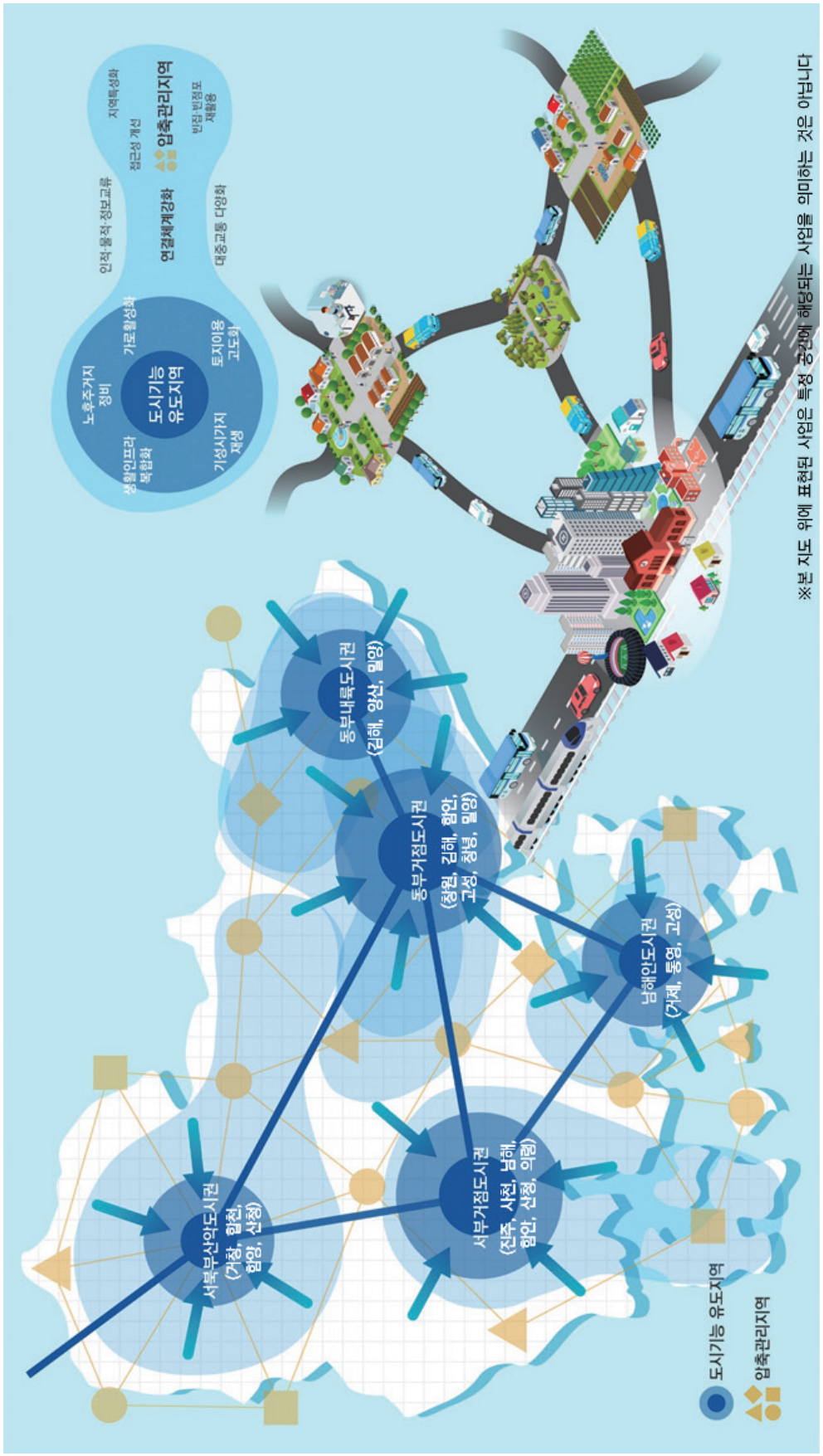
1단계(단기) :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의 재구조화

2단계(중기) : 유연한 도시개발과 관리 및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

3단계(장기) :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공간 창출로 지역 경쟁력 강화

〈그림 3-1-3〉

「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」 구상도



3.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

(1) 기성 시가지 및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거점 도시 기능 유도

● 상업, 의료, 학교 등 도시기능시설을 집중하여 자립적 공간 단위 설정

- 토지이용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

● 다양한 도시재생 수법을 통해 원도심 재정비, 외곽으로의 개발확산 억제

- 민관협력 개발사업 인센티브 부여
-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

(2) 인구감소지역 압축관리계획 수립

●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선제 대응

-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변화와 새로운 변수에 맞춰 계획의 재조성

● 규모의 확대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가치 중심의 효율적인 축소

- 지역 내 빈집, 빈 점포의 철거 또는 재활용을 통해 정비
- 주변 거점 도시와 대중교통 연결체계 강화

● 섬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전략 수립

-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섬 조성: RE100 아일랜드

(3) 다양한 대중교통 및 물류 교류 체계마련

● ITS기술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교통 서비스 실현

- 버스 터미널, 철도역 등 교통 결절점의 복합환승 시설 구축 · 정비 및 입체적 활용
- 스마트교통 인프라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

●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

- 기존 대중교통 노선 강화, 커뮤니티 버스 및 수요대응형 택시 도입

(4)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공급

청년, 고령자, 독신자 등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응

-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
- 사회주택, 공동체 주택 등 1~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

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주거공급 프로세스 다양화

-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
-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양질의 공동체 주택 공급 지원

(5) 생활인프라의 성숙한 공급과 관리

시 · 군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공공서비스 이용

- 생활인프라의 기능 복합 및 서비스 비혜택 지역에서의 접근체계 개선
-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

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및 생활인프라의 종합적 관리

- 생활인프라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 및 모니터링

(6) 공공공간의 유연한 활용과 가로 활성화

보행친화도시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

- 건축물 전면공간(파사드, 주차장, 옥외광고물 등)에 대한 디자인지침 수립

광장, 도로 등 통행공간을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명소화, 경제 활성화

- 방치된 저 · 미이용지는 활성화 용도(공원, 도심농원 등)로 전환
- 도로, 공원 등에 다양한 공간 시범운영 및 제도 마련

(7)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는 경관계획수립

지역의 역사, 문화, 환경, 생활 등에 관한 종합적인 미래경관 제시

-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
- 지역의 경관 가치 향상을 위해 근 · 현대 건축자산의 적극 활용

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특화형 경관계획 수립

- 주민 주체의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

(공간구조전략2) 시 · 군 계획지침

-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가치 중심의 효율적인 장기발전전략 수립
-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이동성 향상 등을 통해 생활인프라 서비스 비혜택 지역의 접근체계 개선 방안 마련